

시선

사설

유례없는 사건,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길

국제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회장직을 중도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.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. 이것이 학칙 상 위법 사항은 아니 라지만 애초에 그 학칙이 회장직 연임과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하는 느슨한 규정임이 드러나 면서, 제도적 위법성 여부보다는 개인적 진정성과 제 도보완의 필요성 차원으로 논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.

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총학생회장직과 그 임기 에 대한 김병경 전 회장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. 현재 제 48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(총학)는 당초 내걸었던 공 약 중 많은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.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뽑아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 이나 양해의 과정보도 없이 재선을 위해 현 회장직을 중 도에 포기하는 행위가 과연 유권자에게 신뢰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다.

두 번째로 지적되는 사항은 차기 총학 선거를 주관하 게 될 당해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중선관위) 위원 장이 김 전 회장의 러닝메이트였던 현 부총학생회장인 라는 점이다. 현재의 권력이 차기 권력을 선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뜰이나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오던 이 구조가, 올해에 중선관위 위원 장과 특정 후보가 개인적·정치적 사적 관계로 엮이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공정성 논란에 직면 하게 된 것이다.

이 상황을 올바르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헌회 의의 사례를 경유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. 현대 대통 령제를 탄생시킨 1787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는 대통령의 임기와 재임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대통 령의 독립성과 책임정치의 실현여부와 맞물린 사안으 로 파악했다. 그들은 만일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게 될 경우 재임이 불허된다면 유능한 인물이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 고 될 유능한 인물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될 것을 우려 했다. 또 만일 대통령을 입법부가 선출하게 될 경우 재 임이 허용된다면 대통령과 입법부는 현재 권력의 유지 를 위해 공모할 수 있으리라 우려했다. 55인의 제헌회 의 대표들은 이러한 고민 끝에 대통령이 무능한 경우 를 대비해 임기를 짧게 하는 한편 유능한 경우에는 지 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임을 허용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오늘날 미국 대통령제의 기틀을 완성했다.

이를 현재 국제캠퍼스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결국 상 당한 수준의 제도적 보완과 조직 개선이 요구되고 있 는 상태임이 드러난다. 먼저, 별도의 연임규정이 마련 돼 있지 않은 현재의 학칙으로는 현 총학 회장의 연임 시도 시 필연적인 업무공백을 수반하게 만든다. 때문 에 현행 학칙에 대한 세밀하고 정치(精緻)한 제도적 보 완이 시급히 요구된다. 다음으로, 현재 권력이 차기 권 력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행 중선관위 시스템은 유권자에게 현재 권력의 유지를 위해 중선관위와 특 정 후보가 공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. 중 선관위를 일반학생 등 총학 집행부 외부에서 초빙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.

모 학과 교수 성폭력 의혹 수업은 그만둔 상태

미디어 여론동향 2016.10.17 ~ 11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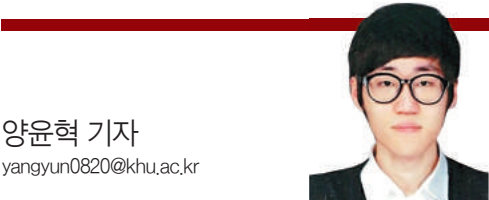
여론동향팀 khunews@khu.ac.kr

우리대학 모 교수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오랜 기간 받아왔다는 피해자의 글이 SNS에 게재됐다. **〈1보〉교 내 교수 성추문 논란/대학주보 온라인, 2016.10.26**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B교수의 처제로, “28년 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고, B교수의 학위논문을 대 필했다”고 주장했다. 이에 B교수는 SNS를 통해 설명 으로 반박 글을 올린 상황이다. A씨는 B교수를 유사강 간 및 폭행, 학대, 강도 등에 의한 현금 갈취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다. B교수는 해당 사건 언론유포에 대해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다. 우리학 교 감사행정원은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B



이 주의 주제 - 총학생회장 사퇴

어제의 회장이 오늘의 후보자



양윤혁 기자 yangyun0820@khu.ac.kr

정치권에서 재선을 위해 임기 중에 직위를 버리 는 경우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. 실제로 작 년,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거론 되던 시기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 항간에선 김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예 측이 나온 바도 있다. 대표가 물러난 집단에는 혼 란이 불가피하다.

우리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진행 중이다. 지난달 31일,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 던 김병경 회장이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퇴 서를 올리고 돌연 사퇴했다. 학생 커뮤니티에서 는 김 회장이 차후 선거본부에 참여하는 것인지, 직접 재출마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됐다. 의문은 바로 다음 날 풀렸다. 김 전 회장은 Re:action 선거본부의 총학 회장 후보자로 등록 했고, 학생 사이에선 새로운 파장이 일었다. 게다가 임기와 후보자 등록 기간이 겹쳐 김 전 회장은 임기의 약 6분의 1 가량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.

총학생회장이 연임을 시도한 경우는 우리학교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다. 학생회칙에는 총학생회 장의 임기와 지위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, 연임 또 는 사퇴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. 따라서

김 전 회장의 행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
이후 선거과정에 대해 일각에선 의심이 일고 있 기도 하다. 하루 만에 총학생회장에서 후보자 신 분이 된 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선거에서 중선관위원장을 맡는 이는 48대 총학에서 김 전 회장과 일했던 박수지 부회장이자. 하지만 김 전 회 장의 사퇴 이후 회장 업무를 박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중선관위장을 맡는 것도 회칙에 부합한다. 역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.

김 전 회장이 처음으로 총학회장에 도전했던 지 난해 선거 당시, 모호한 선거체적으로 인해 공과 대학 제1투표소, 국제경영대학 투표소 무효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. 당시 중선관위의 장을 맡은 47대 총학 김용석 전 회장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 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인수인계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 혔다.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병경 전 회장은 사퇴 전까지 선거체칙 개정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.

지난 선거에서 불거졌던 선거시행세칙 문제와 현 김 후보자가 일으킨 파문은 회칙의 허점이다. 회칙 상의 개정을 통해 중임·단임 여부를 명시하 도록 하고, 이를 넘어 연임 시 후보자와 중선관위 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. 김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시스 템의 보완 없이는 중선관위와 김 후보자 간의 의 혹은 계속될 수 있다.

‘진정성’의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

세시봉

김도엽 〈편집장〉



비선실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지 2주가 지나간다. 무수히 많은 대학과, 단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시국 선언을 진행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. 하루하루 수 많은 언론을 통해 뉴스가 나올 때 마다 국민들은 분노 를 넘어 더 큰 자괴감에 빠지는 모습이다. 박근혜 정부 초기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이러니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 양새다. 이번 사태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한 곳 으로 모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.

의혹이 제기된 후 박 대통령의 녹화사와 영상과 국 민대담화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.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동 정과 연민으로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.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수많은 언론사의 의혹제기와 비판에도 불구 하고 현 상황을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부정 하고 있다.

박 대통령은 사과 영상을 통해 ‘최근 일부 언론 보 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 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’라고 말했다. 정말 진솔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나왔다면 이 의혹 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단순 ‘일 부 언론’이라고 한정시켜 버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.

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. 이번 논란을 덮을만 한 큰 이슈를 또 다시 들고 올 것이란 것을. 박 대통 령은 JTBC의 의혹 제기 후 곧 바로 개헌이라는 논의 를 들고 온 것과 **故백남기** 농민에 대한 경찰 강제 집 행이라는 것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 키려 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돌려 지지 않자 강제 집행은 유족과 합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처럼 덮여졌고, 개헌이라는 논의는 곧 바로 사그라 들었다.

이러한 상황을 보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 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. ‘청와대에서 굶을 했 다고 하는데,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’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. ‘최순실이 검찰 조사에서 대역을 썼다’, ‘곰탕을 먹은 적이 없다’, ‘악마는 프라 다를 읽는다’라는 의혹과 농담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 르렀단 말인가.

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.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. 오히려 이 부끄러 움을 무릎 쓰고 지금에서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 다는 점이 감사할 정도이다. 이번의 사태는 박 대통령 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. 국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 지금,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이뤄져온 모든 부조 리를 반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때이다. 또 다시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운 시기다. 이번에도 비선실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‘국민들은 개, 돼지이기 때문에’ 이 번에도 그냥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드디어 국민의 뜨 거운 맛을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, 이번 기회를 또 다 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.

알림

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!

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.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.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.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. 늘 당신의 옆 에 있겠습니다.

http://www.mediakhu.ac.kr/khunews/inform\_us\_list.asp



교훈 학원의 민주화 | 사상의 민주화 |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

대학주보

1955년 5월 12일 창간(주간)

발행·편집인 조인원 | 주간 김해경 | 편집장 김도엽 | 제작/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(주) 구독료 1년 1만원 | 구독 02-961-0093-4 | 주소경정 02-441-7317(미대7기회) 인터넷 대학주보 http://media.khu.ac.kr | 이메일 khunews@khu.ac.kr

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(회기동) / Tel 02-961-0093-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(사천동) / Tel 031-201-3230-2, FAX 031-204-8121